

“전북, 첨단산업 교두보로… 완주 수소특화산단 조성 추진”

尹, 27번째 민생토론회

新서해안 시대 여는 전진기지 전북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 확충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 방안 논의 내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현안을 경청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전북이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생명 ▲문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 산업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도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연 기자 syj@metroseoul.co.kr

李 “당원 의사 의한 결과물… ‘일극체제’ 표현 옳지 않아”

野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

김두관·김지수 “일극체제 공감”
종부세·금투세에서도 입장차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 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

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의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국민통합위 “정책금융 성실상환하면 이자 페이백 제공해야”

우체국,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강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18일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상환을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에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노력과 처벌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가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줄어드는 은행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도록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계와 신

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미등록대부업체, 온라인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생계 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연 기자